野 단독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26일 임명안 표결

12·3 내란사태 견해 등 질문…오늘 국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진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했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어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야당은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의 쟁점이 동일하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88년 법대에 들어갔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은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힘을 줬다"며 "법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것', '실제로 작동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만드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면서 "혼인·출산·육아와 거의 동시에 시작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씩 시들해졌다. 박완서 선생의 말처럼 여러 다른 여성의 희생하에 고군분투했지만, 숙고할 시간은 부족했고 정보는 얻기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위주로 설정돼 있어서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밝힌 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언급하며 "사법부로서는 여성 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해 사회적 현상을 보다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됐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한덕수 대행 탄핵 방침에…국힘 "탄핵 인질극"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검토 방침에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며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 강행하더라도 직무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 시)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해석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이 이의가 있다면 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지만, 이는 헌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산단, 산업·고용 위기 대응 지역 지정을"

민주 안도걸 의원 기자회견…"대내 불확실성 해소 선제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광주일보 12월 4일자 1면〉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 점검단 회의에서 "여수산단을 산업·고용 위기 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 지원,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R&D) 자금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도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점검단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지역 화폐 발행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조계원(여수을) 의원도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조속한 산업위기 대응 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우원식 "韓〈덕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무이행하라"

언론에 입장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라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이다"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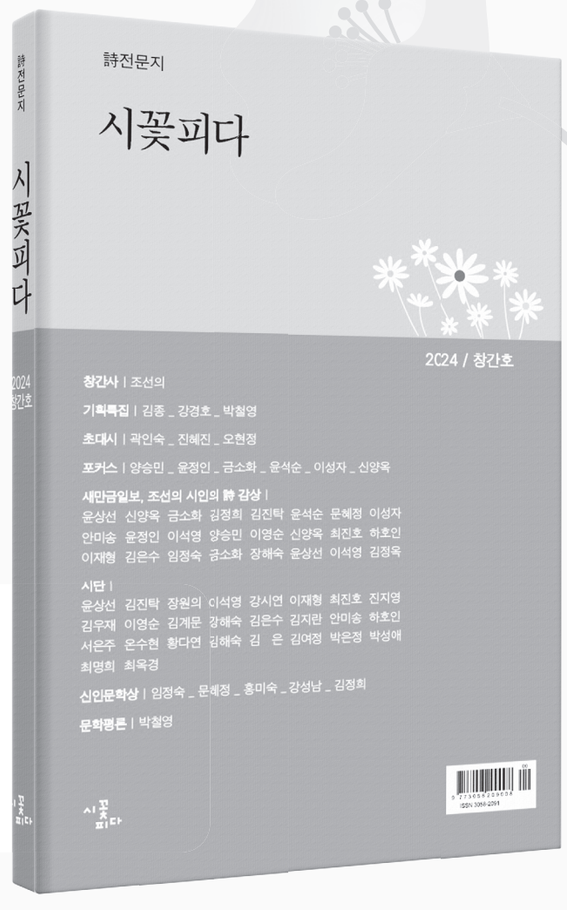
또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